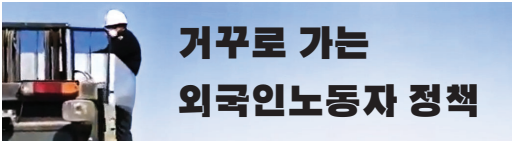


외국인노동자 품는 일관된 지원 대책 절실하다



거꾸로 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

〈하〉 장기 지원 로드맵 필요

♣ 카자흐스탄에서 온 노라이(여·26)씨는 “최근 산부인과에 가야할 때가 있었는데, 직접 통역해주는 사람을 고용해 3만 5000원을 주고 동행했다. 의사소통이 힘들니 행정적 일을 처리하는 건 더 힘든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면서 “외국인 지원 센터가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에다 현장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장 상담, 동행 통역 등 정착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필요로하는 지원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한국에 온지 1년 6개월이 된 알렉산더 기어(32)씨도 “한국에서 오래 잘 소통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매번 큰 돈 주고 통역사를 고용해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을 들어 해마다 늘어나는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모 경쟁을 강요하는 현행 예산지원 체제에서 벗어나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한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예산 지원이 해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센터의 안정적인 보호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지원 사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지원센터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베트남 출신 원가비(여·35)씨도 “특근·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육절을 일삼는 사례가 주변에 너무 많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모 경쟁 통한 ‘널뛰기’ 지원에 일회성 사업 반복…홍보도 안돼 노동자들 지원센터 존재도 몰라 동행 통역 등 정책 지속되도록 정부·지자체 등 적극 나서야

신고를 꺼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럴수록 현장점검과 교육, 상담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요구에도, 각 센터에서는 운영비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지원 사업을 확장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일요일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진료소를 열고 있는데, 의료진들은 모두 자원봉사자고 행정업무는 상근 인력 두명만이 맡고 있다. 공모에 선정돼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하루에만 60~70명 정도의 외국인이 찾아오는데 예산 부족으로 더 많은 인원을 진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센터 관계자 설명이다.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은 “우리 센터는 미등록 외국인도 진료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단체에 별 관심이 없다”며 “공모에 매번 선정돼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그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없어 매번 어렵다. 시 정책은 고려인에게만 쏠리고 다른 이주민들에게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도 국비 지원이 없으니 지원을 늘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삭감되기 직전인 지난 2023년 광주·전남 내 외국인 지원센터 총 8곳(광주4·전남4)이 전달 받은 예산은 총 5억 2419만원이지만 지난 2024년부터 지원센터 직접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공모 경쟁에서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올해 전남지역 6곳의 지원센터는 국비 지원



6일 광주시 광산구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알둘라씨와 에드워드씨가 점심시간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오른쪽은 공장에서 소켓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 기어씨.



6일 광주시 광산구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알둘라씨와 에드워드씨가 점심시간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오른쪽은 공장에서 소켓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 기어씨.

이 전혀 없어 전남도 지원비로만 충당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인력이 없어 현장 출장 대신 전화 상담에 그치는 등 반쪽 운영을 해 온 실정이다.

그나마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향후 3년 간 국비 2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원 예산으로는 부족해 지난해 시비 3억을 투입했고 올해는 4억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당시 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예산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해 간부직을 줄이고 상담원을 늘리는 구조로 개편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외국인주민과 관계자는 “지자체는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 인권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국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9개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를 추가하기 위해 예산 확대를 요구한 상태”라며 “현 체제 내에서, 과거 운영됐던 소지역 센터 중 일부라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전남 오늘 최고 120mm 강한 비

오후부터 다시 폭염특보

광주·전남에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 9시께까지 광주·전남에 30~80mm, 많은 곳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7일 새벽까지는 시간당 30~5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7일 오전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매우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7일 새벽을 기준으로 거문도, 초도를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7일 오후부터는 차차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7일 아침최저기온은 24~27도, 낮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상되니 하수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강한 비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고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신안동 3차 수해 막아라” 광주시 긴급 대책

옹벽 배수 구멍 65개 뚫어 …주민들 “즉각적인 해결책 내나라”

광주시와 북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신안동 일대의 3차 수해 예방을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정작 주민들은 당장 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는데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6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회에서 신안동 수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해와 관련해 광주시와 북구가 추진 중인 대책과 피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논의됐다.

북구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는 서방천 제방 옹벽에 배수 구멍 65개를 새로 뚫는 작업을 했다. 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 및 지원 절차도 시작했다

고 차수막 설치·풍수해보험 자부담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게 북구 설명이다.

광주시는 또 옹벽 하부 배수구 신설, 빗물받이 위치 표지판 설치, 옹벽 배수구에 일방향 수문(게이트) 설치, 서방천 하상 퇴적물 준설, 서방천 직선화, 신안철교 교각 4개 철거, 침수지역 하수관로 분산, 2028년 완공 예정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하천 폭 확장 등 개선안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옹벽을 부수든, 하천 폭을 확장하든 법적·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그 시간동안 불안해할 주민들을 위해 옹벽에 배수 구멍부터 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즉각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맹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

‘무등산 화장실 이견 아니죠’ 한 달…무등산국립공원 ‘묵묵부답’

시민단체, 공원측 무대응 비판

무등산 국립공원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화장실)이 들어섰다는 논란<광주일보 7월 9일 7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시민과 사전 논의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측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무등산보호협의회 운동본부는 7일 오후 6시 30분에 이사회를 열고, 최근 장봉제와 토끼등 일대 간이 화장실 설치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무등산은 문화재에 준하는 세계적인 보호 대상인 만큼, 단순한 임시 건축물이라 해도 충분한 사전 논

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정작 공단 내 민관 협의위원회에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지금까지 조악한 디자인과 불합리한 위치로 설치하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 광주시장의 요청에도, 무등산국립공원측이 한달이 지나도록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무등산에 ‘국립공원 이사장님! 화장실, 이것은 아니지요’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즉각 대

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무등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민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게재했다.

채현준 무등산보호협의회 공동의장은 “회원들 사이에서 ‘무등산 화장실 순례 한번 돌아야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설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등산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형태와 배치 방식 모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탐방시설과 산과 조화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촌스럽고 ‘생강집’ 같은 건물 말고 주변과 어울린 것이 필요하다. 이룸에 걸맞게 고유의 멋을 살린 정돈된 디자인으로 앞으로의 시설물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